



이상돈 (중앙대 교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 이상훈 (매일신문 편집국장) 이해훈 (새누리 전최고위원) 채진원 (경희대 교수) 김윤 (경국학당 대표) 전계완 (매일 P&I 대표) 이동관 (매일신문 문화부장) 이연경 (채널A 아나운서) 김대영 (경희대 교수)

“모든 갈등의 뿌리는 정치... 집권세력 올바른 정치가 해결책”

영호남상생포럼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갈등과 세대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를 주제로 대통합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연경 채널A 아나운서(1부)와 김대영 경희대 교수(2부) 사회로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남북갈등 등으로 나눠 7시간 동안 진행됐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지역갈등

▲이상돈 중앙대 교수=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권세력이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뿌리는 영남이다. 따라서 현 정권이 잘치 못하면 영호남 지역갈등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정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도외시키고 무리한 정책을 밀고 나가면 야당과 비판언론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정상적 정권이라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여론은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지역갈등은 심화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지역갈등이 해소된다. 또 영남과 호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천이 당선'이다. 영호남에선 공천이 진짜 선거고 본 선거는 요식행위다. 정치권은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를 말하기 전에 정치권은 그들의 뒷받침에서 이뤄지는 퇴행적 정치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호남에서는 호남의 지역주의를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저항하는 지역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영호남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있어 양 지역 모두 특히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인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 사이에서는 갈수록 지역감정이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층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더 강화하고 있다. 두 정권은 5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영남 위주로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호남 입장에서는 배제와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 신지역분론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고도성장에서 호남 배제를 발송할 수 있는 정치적·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정치 제도적으로는 현재 승자 독식 구도를 없애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훈 매일신문 편집국장=영호남 갈등은 과거에 존재했고, 부모의 의식을 학습 받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완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 일부가 확산하려는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영향은



'영호남 상생포럼' 주최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갈등과 세대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란 주제로 대통합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열린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젊은세대들 왕성한 경제활동 없인 세대갈등 더 심화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심각...지역 불균형 해소 시급 정권따라 달라지는 대북정책이 남북·남남 갈등 요인

었다. 지금은 상생의 길로 나가고 있다. 이제 갈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71%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외국 관광객도 수도권에 70% 이상 온다. 영호남 갈등이 완화되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이런 부분이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호남의 1970년대 인구 비중이 24%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10% 수준이다.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광주전남 기업은 25개에 불과하다. 100대 기업은 하나도 없다. 지역 불균형·격차 심각하다. 지역갈등의 개념과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갈등이라면 다투야 하지만 호남이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지역 불균형의 해소여야 한다. 영호남 격차는 80~90년대 주로 논의됐고 이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제는 중부권과 남

부권으로 분류된다. 이제 영남도 힘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역격차를 논의하되 호남의 낙후도를 조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줘야 한다. 정부의 대형 정책과 개발 사업이 경제성과 인구수를 따지면 호남은 또다시 차별받는다. 낙후도와 균형발전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

◇ 세대갈등

▲이상돈=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경제도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이란 메가트렌드가 야기하는 세대갈등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더욱 많은 젊은 세대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와 건강보험 제도는 감당할 수 없다.

▲천정배=세대갈등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인간의 생애주기의 문제다. 인류 역사상 세대 차이는 있었다. 오히려 연금·일자리 등을 둘러싼 세대갈등은 국가의 정책적 실패 문제다.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해당이다. 다만,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이해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세대갈등이 세계 전쟁을 몰고 올 정도로 심각하다. 원인은 선진국 진입에도 있다. 선진국으로 가면 성장률이 정체하고 일자리는 없어진다. 고용 없는 성장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며 세대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사회복지제도는 군사정권 때 졸속으로 만들어 유지 집행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해 청년이 이제는 돈을 내서 복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간이 가면 세대간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다. 해결책으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일

자리를 만들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 지금의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는 이 나라가 지탱할 수 없다. 선별적 복지로서 가야 한다.

▲기현호=참정권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꿈과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그들의 얘기를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한다.

◇ 계층·남북·남남 갈등

▲채진원 경희대 교수=남북갈등뿐 아니라 남남갈등도 심각하다. 남북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남갈등을 해소해 국론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북정책은 합의되지 않았다. 비전이 정립되지 않고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남남갈등이 지속하는 이유는 정치엘리트 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남갈등은 국민 차원이 라기보다는 정치엘리트 수준에서 갈등이다. 정파별로 이념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다.

▲김윤 경국학당 대표=아래 세대들이 기대와 희망이 없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부모와 학벌에 의해 세습에 가까운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 때문에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기득권 담합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 국공적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다.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정치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가 그 공공의 역할을 못하고 담합구조에 들어가 있다.

▲전계완 매일 P&I 대표=갈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속사정도 복잡다단하다. 그러나 모든 갈등의 양태는 하나로 흐르는 맥이 있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갈등을 해결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봐야한다. 또 국민 100%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개인의 행복의 기준을 바꿔주는 제도·문화적인 움직임 없이는 갈등 관리조차 어렵다.

▲이동관 매일신문 문화부장=모든 갈등의 뿌리는 정치고 해결책도 정치에 있다. 소선거구제라는 승자 독식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양대 정당이 나눠먹기 하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또 교육의 개혁이 중요하다.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은 평민이고 서울은 양반·귀족이라고 본다. 이는 더 심화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영호남 갈등을 능가할 것이다. 개선 방법은 지방자치제의 강화에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쌀 관세화로 추가적인 의무수입을 막고, 높은 관세로 우리 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쌀 관세율,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 쌀 관세율(513%)은 전문가와 관세부처가 면밀히 검토하여 WTO 농업협정에 따라 산정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WTO 회원국들에게 관세율 계산 근거와 논리를 설명하여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수입쌀 가격이 국내쌀 가격보다 약 2~3배 비싸지므로, 외국 쌀 수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수입이 늘어나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의 85%를 보전해줌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 모든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쌀은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수입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 쌀을 관세청 사전세역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입 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우리 쌀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 쌀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이모작 확대 지원, 영세·고령농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쌀 농가 소득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들녘경영체 육성, 전입농 규모화 촉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RPC통합 등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제품 수출, 쌀 저조금 도입 여건 조성 등 쌀 소비촉진과 수출을 확대시키겠습니다.

